

# 농산물 수급·관리 도마위… “aT, 배춧값 심각단계에도 방치”

## 2024 국정감사

늦장대응으로 가격 폭등 지적  
“위기단계 관리 기준 개선해야”

홍문표 aT 사장 “유통구조 혁신 노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늦장 대응이 올가을 배추 가격 급등에 한 몫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2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가 aT,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춧값이 지난 9월4일부터 ‘심각’ 단계였다고 운을 폈다. 이어 aT 측에서 즉각 대응하지 않고 20일가량이나 방치한 결과, 소비자가격이 가파르게 뛰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aT는 배춧값이 이미 폭등할 대로 폭등한 9월25일에서야 여름 매출 긴급수급안정 대책 계획을 마련했다”고 비판했다. 이후 배추 값이 이미 치솟은 시점인 9월 하순 들어서 비로소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의 aT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비축물량 할인, 수입관세 인하 등의 대책을 세웠다는 게 문 의원의 주장이다.

또 심각 전 단계인 ‘경계’ 단계가 8월 14일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진 점을 감안하면, 8월 중순부터는 심각 단계로 상향될 것을 염두에 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품목별 위기 단계 관리 가이드라인 기준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위기 단계 기준 중 여름 배추의 경우 ‘심각’ 단계에 도달하려면 등락률이 79%에 달해야 한다. 문 의원은 “등락률이 지나치게 높게 잡혀 있는 게 문제”라며 “배추 가격이 폭등할 대로 폭등한 상태에서 대책을 내놓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홍문표 aT 사장은 “유통 문제는 개인이 구조를 바꾸기는 어렵

다”며 “농림부·기재부 등 당국과 협조해 유통 구조를 4, 5단계로 돼 있는 현행에서 2, 3단계로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혁신하지 않으면 국민의 삶의 질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소 한 마리가 840만 원에 판매되는데, 소비자에게 올 때는 1772만 원 수준으로 급등하고 중간에 932만 원은 유통비용으로 책정된다”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농가에서는 고생해서 소 한 마리를 키워 팔면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유통업체들은 소 한 마리를 팔 때 333만 원, 무려 18%의 유통 마진을 얻고 있다”고 했다. 이에 홍 사장은 “향후 정부와 aT가 앞장서서 이 부분을 개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지연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은 “수시인출형 농지연금은 지금 가입을 못 받고 있다”며 “국회와 협력해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정책의 신뢰성 문제도 있고 해서 아주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지연금은 고령층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목표로 도입됐다. 생존 기간에 매월 받는 종신휘과 만기를 정해 놓고 받는 기간형으로 나뉘는데, 수시인출형은 종신휘의 한 종류로 대출한도의 30% 내에서 필요할 때 돈을 뺄 수 있게 한 제도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이후 수시인출형 농지연금의 지급 신청이 중단됐다. 예산 부족이 문제였다.

윤 의원은 “작년에 약 70%가 넘는 200억 원 넘게 미지급했고 그걸 올해 예산으로 지급했는데 올해도 미지급 사태가 예견된다”며 “정부가 약속을 했는데 제대로 집행 못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 산업부, 전력·플랜트 등 국제 협력 강화

韓-카자흐스탄 에너지부장관 회동  
복합화력 발전소 건설 등 협력 확대  
안덕근 장관, CFE 이니셔티브 소개

정부가 카자흐스탄과 전력·플랜트·공급망 등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덕근 장관과 알마사담 샤타리예프 카자흐스탄 에너지부장관이 만나 양국간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지난 6월 12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한-카자흐 정상회담 이후 첫 양국 에너지부장관 간 만남으로, 에너지 분야의 정상회담 성과를 점검하고 조속한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취지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마사담 샤타리예프 카자흐스탄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날 양국은 지난 정상 순방이 에너지 분야 교류·협력을 강화하는데 획기적인 계기가 됐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양국 간 체결된 ‘전력산업 협력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발전소 환경설비 개선 사업, 복합화력 발전소 건설, 재생에너지 확대 등 카자흐스탄의 전력정책 추진에 있어 한국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구축과 산업-에너지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등 에너지 분야 이외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

안 장관은 이날 가스처리 플랜트 등 카자흐스탄이 추진중인 에너지 플랜트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요청하고, 우리정부의 CFE(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소개하며 카자흐스탄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근면위,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의결

노조 유급 전임자 1명~2명 전량

앞으로 공무원 노동조합도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속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면위)는 22일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타임오프는 노조활동 지원을 위해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활동 등을 유급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는 조합원 규모에 따라 8단계로 구분돼 적용된다.

공무원 노조 다수가 해당하는 ‘조합원 300명 이상 699명 이하’와 ‘700명 이상 1299명 이하’의 경우 각각 연간 최대 2000시간과 4000시간의 타임오프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전임자를 1~2명 둘 수 있을 전망이다.

행안부 단위로 설립된 공무원 노조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행정부 교섭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간 6000시간 내 타임오프를 추가 부여받을 수 있

다. 다만, 추가타임오프가 부여된 경우 연간 사용가능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조합원 수가 299명 이하 노조는 타임오프 사용가능인원을 최대 2명 둘 수 있다.

부대의견으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 2년 후 경사노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향후 재심의를 준비하도록 했다.

이날 의결 내용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부 장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고용부 장관이 법제심사·행정예고 등을 거쳐 고시하면 즉시 시행된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의결은 지난해 말 사회적 대화 복원 이후, 상호간의 신뢰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첫 노사의 합의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이번 노정 합의 경험과 자산이 미래세대 일자리를 위한 최근 사회적 대화 흐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 기자

## 국민권익위

“의료법 위반 신고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달 21일까지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 병원, 불법 리베이트 등 다양한 형태의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되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는 온라인 청렴포털 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에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김대환 기자 kdh@

## IMF, 韓 경제성장률 전망 2.5% 유지

美, 英 등 서방주요국 예측치 상향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종전과 같은 2.5%로 유지했다. 이에 반해 미국과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서방 주요국에 대한 예측치는 올려 잡았다.

IMF는 22일(한국시간) 오후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2024년 국내총생산(GDP)과 관련해, 지난 7월 전망치와 동일한 2.5%를 제시했다.

IMF가 제시한 수치는 국내의 주요 기관들의 예측과 같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개발은행(ADB), 한국개발연구원(KDI)도 2.5% 성장을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2.4%, 기획재정부는 2.6%를 예

상했다.

IMF는 전 세계 경제에 대해서도 기존 3.3%(지난 7월 제시) 전망을 그대로 뒀다. 반면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2.8%로, 종전 2.6%에서 0.2%포인트(p) 상향 조정했다. 프랑스 전망치도 0.9%에서 1.1%로 올렸다. 또 영국은 0.4%p(0.7%→1.1%), 스페인은 0.5%p(2.4%→2.9%) 등 큰 폭으로 상향했다. 브라질의 경우, 종전 2.1%에서 3.0%로 무려 0.9%p나 높여 잡았다.

내년 성장률 전망 역시 한국 예측치는 7월에 제시한 2.2%를 유지했다. 오는 2025년 세계 경제는 3.3%에서 3.2%로 소폭 내렸으나, 미국은 내년 수치도 한 1.9%에서 2.2%로 올렸다.

/세종=김연세 기자

## 한국전력, 전기요금 복지할인 자동화

자격검증 RPA 기술 개발… 전국 시행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복지할인 자격 검증 자동화를 본격 시행한다. 한전은 인공지능(AI)과 OCR(문서와 이미지 등에서 문자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을 접목한 ‘전기요금 복지할인 자격검증 RPA’ 기술을 개발해 단계적인 시범운영을 거쳐 10월부터 전국 사업소에서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한전은 에너지복지 향상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장애인, 다자녀가구, 저소득층, 출산 가구 등 8개 복지 유형에 대

해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간 매월 복지할인 혜택을 받는 고객에 대한 자격 검증과 증빙자료 확인을 수작업으로 해 왔으며, 이는 연간 84만건에 달한다.

한전은 이러한 반복 업무를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로 자동화해 복지할인 대상자 적정 여부를 신속 판별하고 부정수급을 조기 예방해 58억원의 비용 절감과 함께 복지할인이 꼭 필요한 고객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